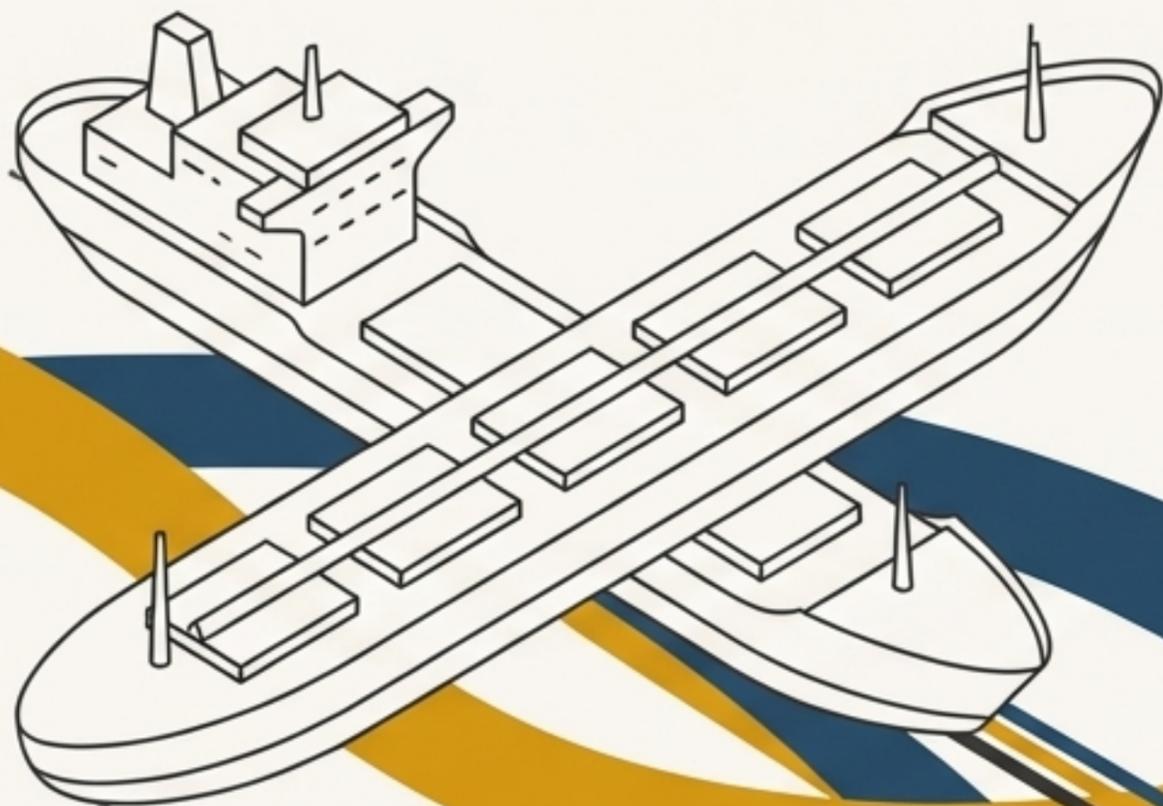


2025년 유럽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 위대한 재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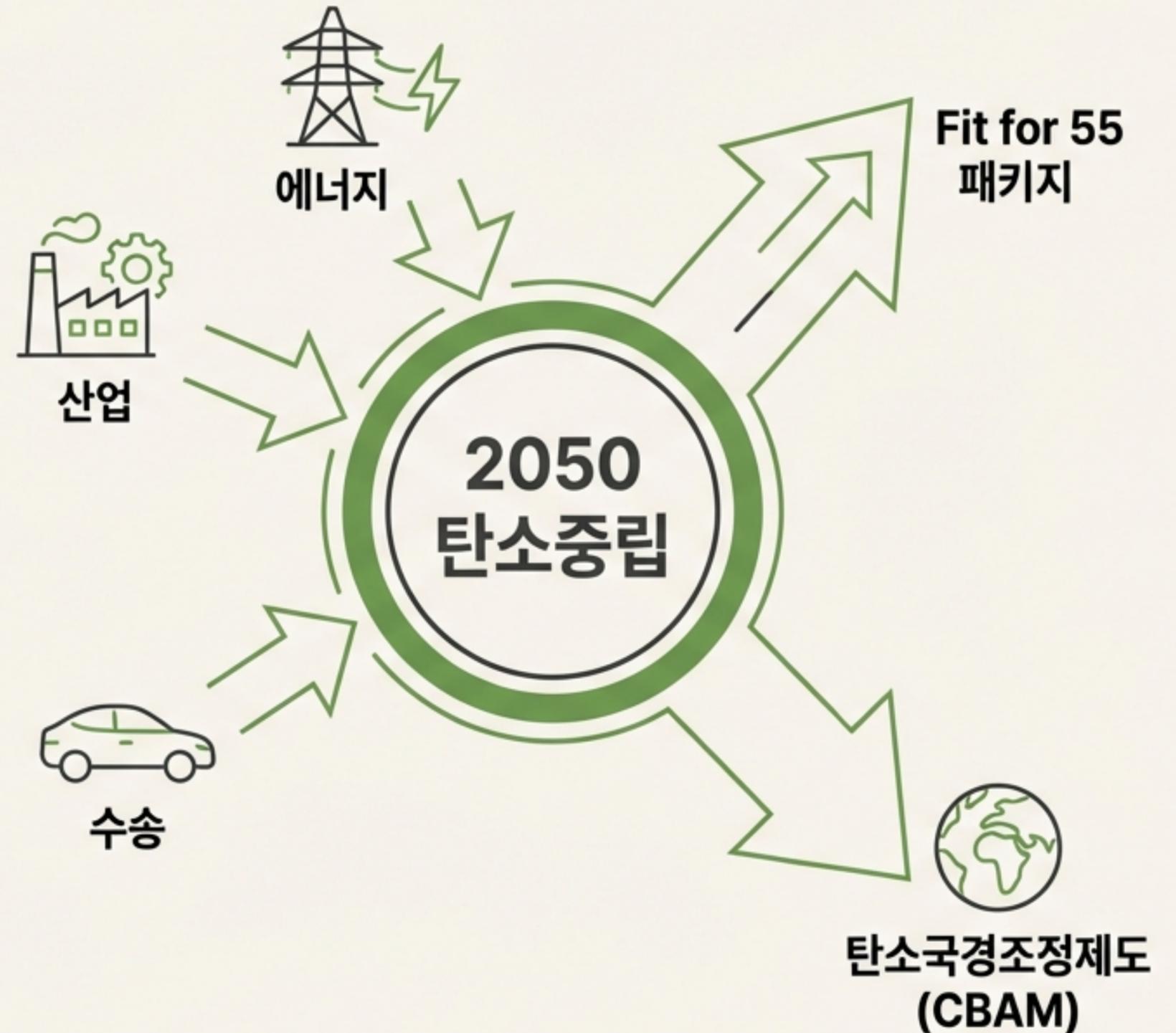
환경 우선주의에서 경제·안보·환경의 균형으로



서막: 유럽 그린딜이 제시했던 담대한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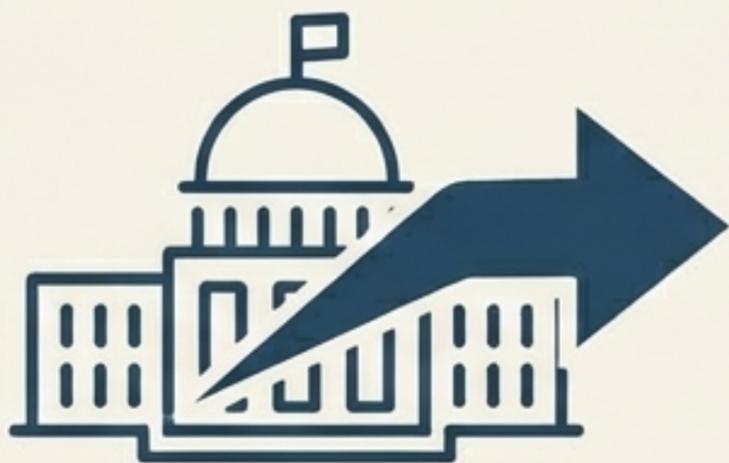
2019년, EU는 '환경 우선주의' 기조 아래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한 포괄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며 글로벌 기후 리더십을 선언했습니다.

- **핵심 목표:** 2050년 세계 최초의 탄소중립 대륙 실현
- **주요 정책:** Fit for 55 패키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강력한 환경 규제 도입
- **당시의 분위기:** 기후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산업과 사회 시스템의 녹색 전환을 추진하는데 초점을 맞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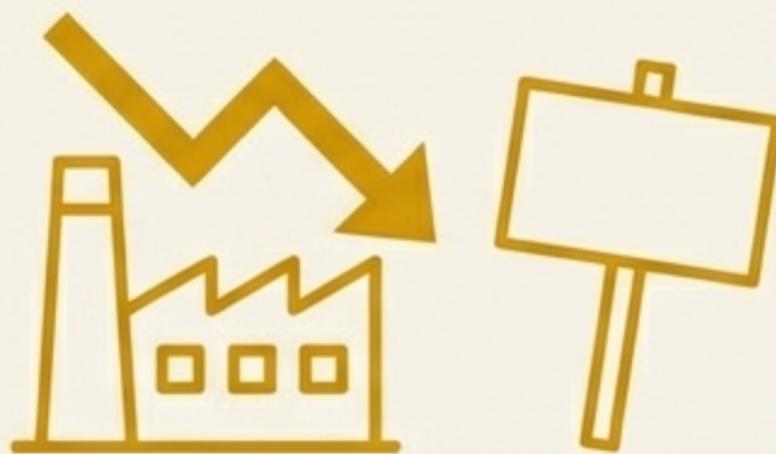
거대한 역풍: 유럽의 정책 전환을 이끈 3대 압력

정치 지형의 우경화



2024년 유럽의회 및 주요국(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등) 선거에서 우익 정당을 득세. 기후 정책보다 경제 성장 및 국가 안보를 우선순위로 설정.

경제·사회적 불만 증대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
강화된 환경규제에 대한 기업과 농민들의 불만 고조 및 대규모 시위 발생.

지정학적 위기 심화



러-우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미-중 분쟁에 따른 공급망 불안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패러다임의 전환: '환경 우선주의'에서 '균형 잡힌 삼위일체'로

기존: 유럽 그린딜 (2019)

환경 우선주의



- 기후 목표 달성
- 규제 강화
- 탈탄소화

현재: 청정산업딜 (2025)

경제·안보·환경의 균형



- 산업 경쟁력
- 공급망 회복탄력성
- 현실적 이행



EU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는 유지하되, 변화된 현실에 맞춰 정책의 속도와 방식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재조정의 4대 핵심축



1. 정치 지형의 변화

선거 결과가 어떻게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꾸었는가.



2. 새로운 산업 청사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부문별 맞춤형 실행 계획.



3. 기업 규제의 합리화

'옴니버스-1 패키지'를 통한 행정 부담 완화 조치.



4. 기후 목표의 유연성 확보

2040년 목표 달성을 위한 현실적이고 유연한 수단 도입.

1



Pillar 1. 정치 지형의 변화: 우경화,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기다

2024년 유럽의회 선거를 기점으로 주요국에서 우익 정당이 약진하며, 유권자들은 '환경규제 피로감'과 '경제 불안'에 대한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Evidence of Shi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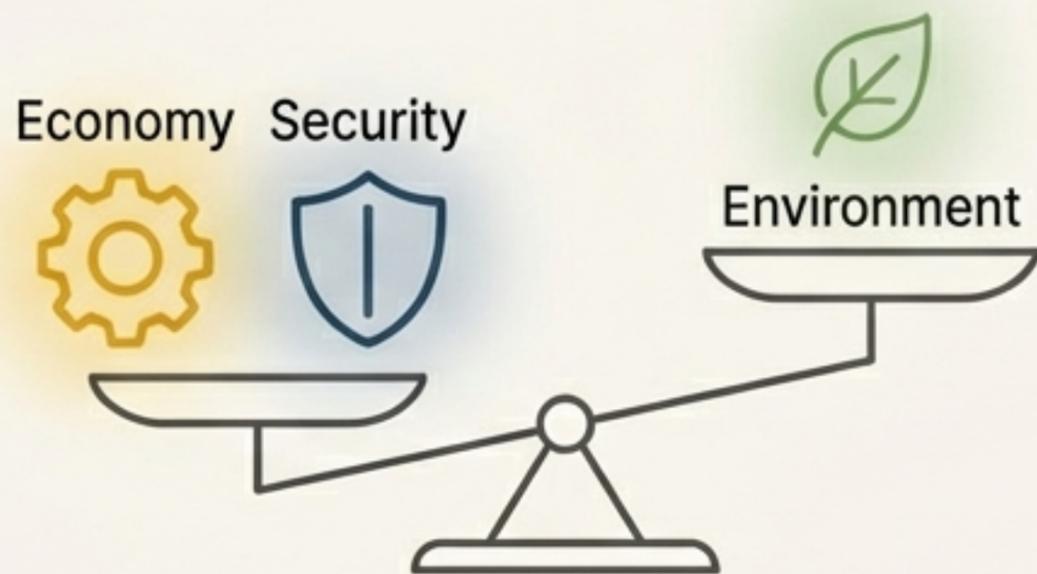


유럽의회 선거: 중도파(EPP·S&D·Renew)가 다수당을 유지했으나, 우익 정당들의 의석이 크게 증가하며 EU 정치 지형의 우경화 평가.

주요국 동향:

- 독일: 극우정당(AfD)이 제2정당으로 부상.
- 프랑스: 극우 연합(RN)의 약진.
- 이탈리아: 2022년부터 우파 연정 집권.

Right-Wing Agenda



이들은 미국 트럼프식의 '탄소중립 철회'가 아닌, '기존 시스템 활용 및 규제 완화'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기후정책보다 경제성장과 국가안보를 우선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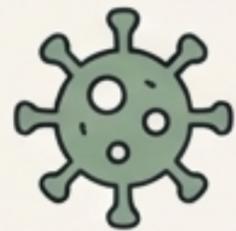
Pillar 2. 새로운 산업 청사진: '청정산업딜'로 경쟁력을 재설계하다

2025년 2월 발표된 '청정산업딜(CID)'은 탈탄소화를 산업 성장의 동력으로 전환하고, 에너지 안보와 역내 산업 보호를 핵심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Key Drivers

Draghi & Letta 보고서: EU 법률의 과도한 행정 부담과 복잡성이 경제 성장을 제약한다고 지적.

3대 외부 충격



코로나 팬데믹
(공급망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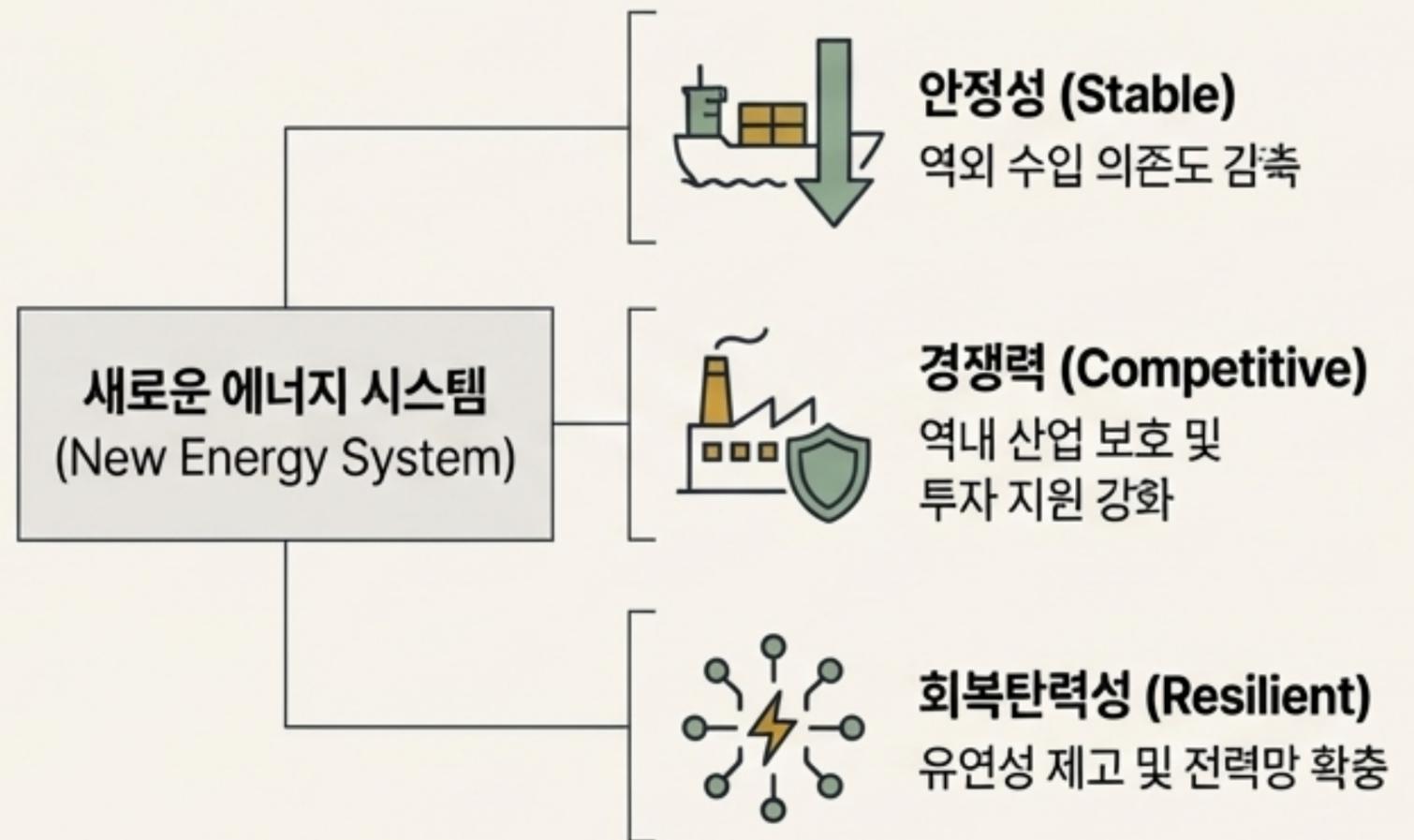


러-우 전쟁
(에너지 위기)



미-중 분쟁
(보호무역주의)

New Energy System Goals



부문별 실행 계획: 균형의 원칙을 현장에 적용하다

산업 (Industry)



- **정책:** 산업탈탄소화 촉진법(안), 적정가격에너지 실행계획
- **내용:** 에너지집약산업(철강 등) 지원 강화, 기업과 가정에 저렴한 에너지 가격 제공 목표.

교통 (Trans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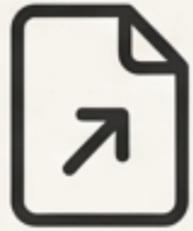
- **정책:** 유럽 자동차산업 실행계획
- **내용:**
 - 전기차 외 합성연료(e-fuel)·바이오연료 공급 증대. 자동차 배출허용 한도를 1년 단위에서 3년 평균으로 변경하여 유연성 부여.

농업 (Agriculture)



- **정책:** EU 농업·식품 비전
- **내용:**
 - 기후 목표보다 경쟁력, 농가 소득, 회복력을 우선시. 2040년 메탄·질소 30% 감축 목표 철회, 살충제 감축 목표 완화.

3



Pillar 3. 기업 규제의 합리화: '옴니버스-I 패키지'로 성장 동력 확보

EU 집행위원회 2기는 기업의 과도한 행정 부담이 투자와 성장의 장애물이라고 판단, 규제 완화를 핵심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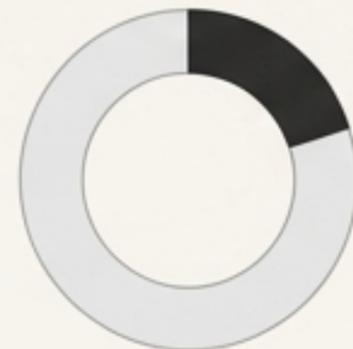
The Omnibus I Package (2025.2.26. 발표)

- **목표:**
 - 기업 행정 부담 25% 감축
 - 중소기업 행정 부담 35% 감축
- **기대 효과:**
 - 연간 행정비용 약 63억 유로 절감
 - 500억 유로의 추가 공공/민간 투자 유치

Evidence of Impact (2025.10.21. 보고서)

약 86억 유로

2025년 상반기 조치만으로 달성한 기업 비용 절감 효과 추산.



2030년 목표(약 375억 유로)의 20% 달성

CSRD & CSDDD: 핵심 지속가능성 규제의 대대적 완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CSRD)

	Before	After
적용 대상 (Scope)	직원 250명 이상 또는 매출 5,000만 유로 이상	직원 1,000명 이상 및 매출 5억 유로 또는 자산 2.5억 유로 초과
결과 (Result)	약 80%의 기존 대상 기업이 보고 의무에서 제외.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데이터 요청으로부터 보호.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CSDDD)

	Before	After
최초 보고 (First Report)	2027년	2028년으로 1년 연기
실사 의무 (Due Diligence Obligation)	하위 공급업체 포함	직접 공급업체(Tier 1)에 대해서만 의무
모니터링 주기 (Monitoring Cycle)	1년	5년으로 연장
민사 책임 (Civil Liability)	EU 차원 규정	폐지, 회원국별 법률에 따름

규제 완화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압박

EU의 규제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역내 산업계와 주요 에너지 공급국들은 CSDDD가 여전히 글로벌 경쟁력과 에너지 공급에 위협이 된다고 추가 완화 또는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역내 산업계 (European Industry)



등 46개 주요 기업

프랑스 대통령과 독일 총리에게
CSDDD 폐지를 요구하는 공동 서한 전달

"과도한 규제와 관료주의 축소가 필요"



주요 LNG 공급국 (Major LNG Suppli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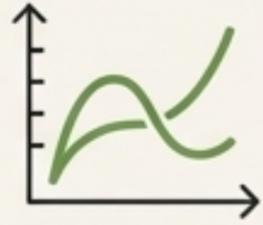


미국(에너지부 장관), 카타르(에너지부 장관)

EU 정상들에게 CSDDD가 유럽 에너지
공급에 '실존적 위협'이 된다는 공동 서한 발송

CSDDD 전면 폐기 또는
핵심 조항(적용범위, 처벌 등) 재검토 요구

4



Pillar 4. 기후 목표의 유연성 확보: 2040년 목표, 현실주의를 수용하다

2025년 12월, EU는 2040년 기후목표(1990년 대비 90% 감축)를 법제화하는 '유럽 기후법' 개정안에 합의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유연성 메커니즘을 공식적으로 도입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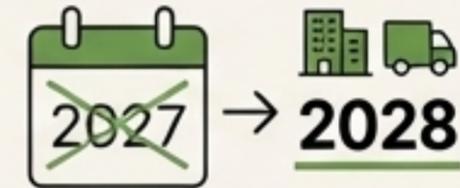
역외 탄소크레딧 인정

2036년부터 감축 실적의 최대 5%p까지 국제 탄소크레딧 활용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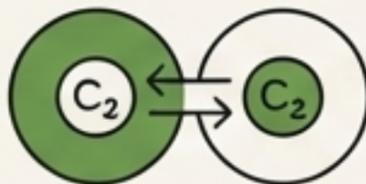
탄소 제거 기술 활용

BioCCS, DACCS 등 기술 및 자연 기반 흡수원을 배출 상쇄 수단으로 인정.



ETS-2 시행 연기

건물·교통 부문 배출권거래제(ETS-2) 시행을 2027년에서 2028년으로 1년 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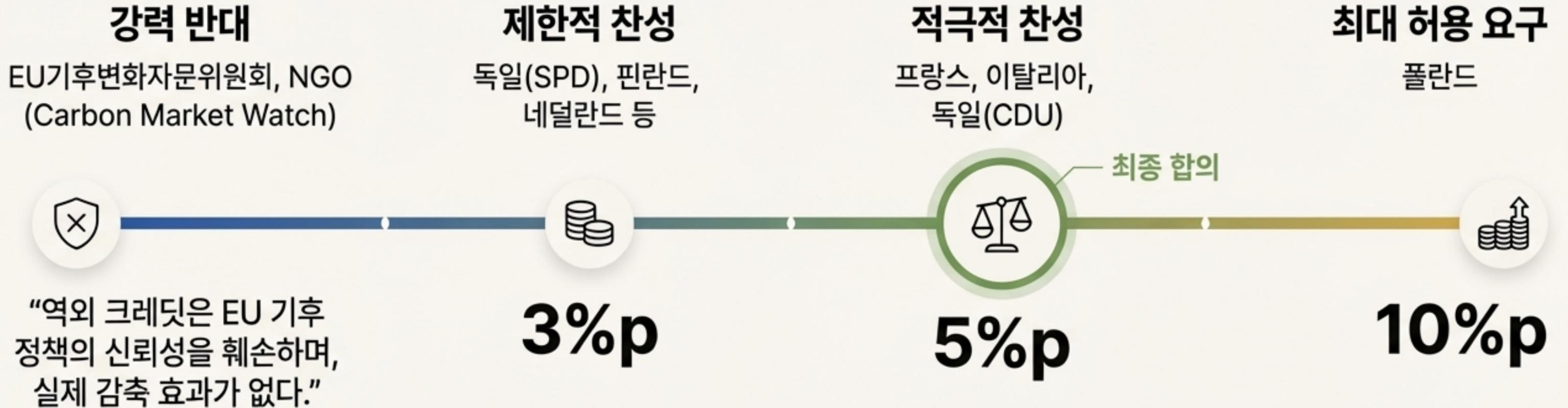


부문 간 상쇄 허용

특정 부문의 감축 미달분을 타 부문의 초과 감축분으로 상쇄 가능.

탄소크레딧 논쟁: EU 내부의 첨예한 의견 대립

국제 탄소크레딧 허용 한도(최종 5%p)를 놓고 회원국, 정당, 시민사회 간 극심한 의견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EU 기후 정책의 신뢰성과 경제적 부담 사이의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 '탄소중립산업법'으로 역내 공급망을 구축하다

EU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탄소중립산업법(NZIA)' 이행 규정을 통해 역내 청정기술 수요를 창출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는 적극적인 산업 정책을 추진합니다.

핵심 메커니즘: '비가격 기준' 의무화



전략적 시사점: 한국의 정책 및 비즈니스에 대한 질문

유럽의 '위대한 재조정'은 단순한 속도 조절이 아닌, '개방된 녹색 시장'에서 '보호주의적 성격의 녹색 시장'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기업과 정책 입안자들은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동시에 대비해야 합니다.

1 새로운 무역 장벽의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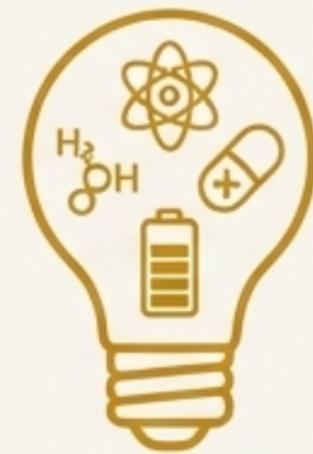
CSRD/CSDDD 규제 부담은 완화되었지만, 탄소중립산업법(NZIA)의 '비가격 기준'(특히 '회복성')이 새로운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는가?

2 수출 전략의 재검토



자동차(합성연료 허용), 철강(저탄소 라벨 도입) 등 유럽의 산업별 정책 변화에 맞춰 국내 주력 산업의 수출 전략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가?

3 새로운 기회 영역 탐색



유럽이 새롭게 강조하는 원자력, CCUS, ESS, 수소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우리의 기술 및 공급망 협력 기회는 무엇인가?